

조세 재정

2017. 10. 16(통권 제58호)

BRIEF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오영민 부연구위원(044-414-2435)



BRIEF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오영민 부연구위원(044-414-2435)

I. 재정사업평가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02
II.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변화	03
III. 재정사업평가제도 진단과 문제점	09
IV. 재정사업평가제도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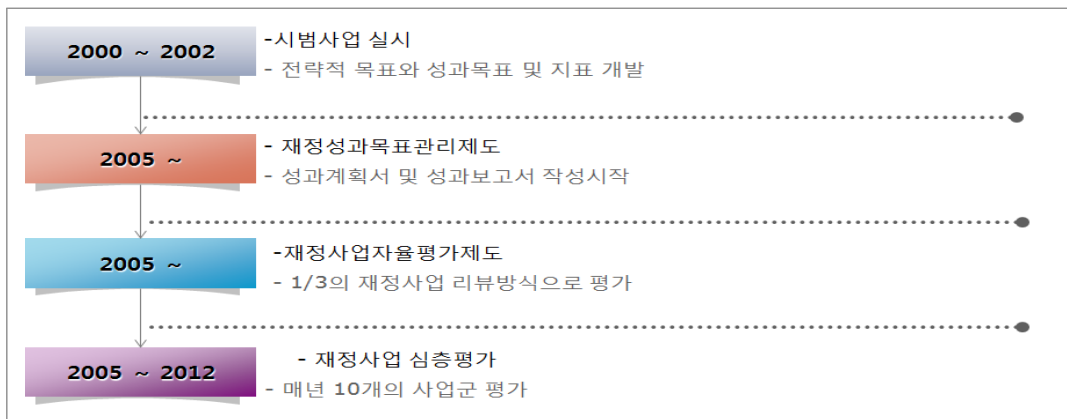


* 본고는 2017년 8월 25일에 개최한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한 공청회』의 내용(오영민, 2017)을 요약·정리한 것임

I 재정사업평가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 재정사업평가제도는 2000년대 중반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무현 정부의 4대 재정개혁제도로 도입
 - 4대 재정개혁은 중기재정계획, 튼튼한 예산제도, 재정성과평가제, 재정정보 및 회계 시스템으로 구성됨
 - 중기재정계획은 2005년, Top Down 예산제도는 2004년, 재정성과평가제도는 2003년, 재정정보 및 회계시스템은 2006년 각각 시작됨
 -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재정정보시스템 (D-brain)은 2007년,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2010년에 각각 도입됨
 - 재정성과평가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로 구성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2000 ~ 200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시작되었으며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는 각각 2005년과 2006년도에 도입

[그림 1]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도입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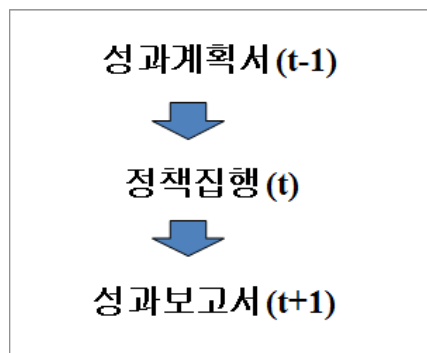
- 특히, 2006년 「국가재정법」의 도입으로 재정사업평가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어 제도적 안정성이 높아짐
 - 제도 도입 이후에도 재정사업평가제도는 세부내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2016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재정사업 통합평가제도로 변화

II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변화

1.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

-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는 재정성과평가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에 해당하는 제도로써 매년 중앙부처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모든 중앙부처는 매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의 확인 점검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보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부처에 개선을 권고
 - 성과계획서에는 ‘비전-미션-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단위사업’으로 이어지는 성과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성과보고서를 통해 재정사업의 성과를 보고
 - 프로그램의 목표와 단위사업에는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를 설정

[그림 2] 재정사업성과목표관리제도의 체계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도입으로 부처의 성과관리체계가 정착되고 재정사업의 결과 지향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2007년 결과지표가 35.8%에서 2015년 58.6%로 상승(오영민, 2014, p.11)

● ●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의 제도개선

-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는 예산체계와의 불일치 및 부처의 보고서 작성부담이 높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체계를 일치시키고 부처의 보고서 작성부담을 줄이는 개선을 시행
- 예산분류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일치
 - 2014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와 관리 과제를 예산분류체계인 프로그램과 단위 사업에 각각 일대일로 매칭시켜 형식적으로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를 일원화

[그림 3] 예산체계와 성과목표관리체계의 일치

(단위: 개)



-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간소화
 - 2016년 성과관리의 실익이 적은 신규사업, 행정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 평가 중복사업 등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여 1,636개 성과관리 대상사업 수를 1,372개로 축소
- 성과보고서와 재정사업통합평가보고서 통합
 - 2016년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정사업통합평가서를 성과보고서로 통합하여 성과보고서의 작성항목을 재정사업통합평가지표의 내용으로 전환

2. 재정사업자율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부시행정부의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참고하여 도입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에서 매년 성과계획서에 표기되는 성과관리대상사업의 1/3을 체크리스트 지표로 점검하는 리뷰방식으로 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일선부처가 12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스스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면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평가결과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점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부처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점검
 - 점수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되며 미흡, 매우 미흡 사업의 경우 차년도 예산에서 10%를 자동적으로 삭감
- 재정사업평가제도 도입 이후, 성과가 부진한 재정사업 예산 약 3조원이 삭감되어 왔고 매년 10~20%의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이 감액

〈표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환류

(단위: 개, 억원, %)

평가연도	미흡 이하 사업 수	t예산	t+1 예산		예산증감률	
			정부안	국회 확정	정부안 기준	국회 확정 기준
2005	87	34,206	29,911	30,435	-12.6	-11.0
2006	65	11,463	5,428	5,408	-52.6	-52.8
2007	31	3,949	3,451	3,597	-12.6	-8.9
2008	104	56,855	46,610	45,896	-18.0	-19.3
2009	70	28,245	26,134	26,311	-7.5	-6.8
2010	116	38,232	33,104	33,445	-13.4	-12.5
2011	117	42,539	37,108	38,121	-12.8	-10.4
2012	97	18,161	14,695	14,704	-19.1	-19.0
2013	126	104,905	93,806	95,413	-10.6	-9.0
2014	75	37,905	34,266	34,331	-9.6	-9.4

자료: 박노욱 외(2015), p. 50

●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제도개선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 일률적인 예산삭감, 평가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편
- 평가수행체계의 분권화
 - 2015년 부처의 평가를 기획재정부가 확인 후 점수를 확정하는 방식에서 개별 사업평가는 부처에 위임하고 부처 평가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메타평가 방식 도입

〈표 2〉 재정사업통합평가 메타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1. 평가과정의 충실도	1-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충실성
2. 평가결과의 적정성	2-1.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2-2. 상대평가 준수 여부
3. 지출구조조정 적정성	3-1. 지출구조조정 규모의 적정성 등
	3-2. 전략적 왜곡 여부
(가점)	성과지표 최우수 부처
(감점)	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자료: 「2017년 재정사업 통합평가지침」, p. 9

- 평가결과의 예산 환류 개선
 - 2015년 미흡 이하 사업의 10% 자동예산 삭감방식에서 평가대상 사업예산 1% 내에서 부처가 자율로 지출구조조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
 - 단,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예산삭감 대신, 제도개선계획서 또는 성과개선계획서 제출
- 평가체계 통합
 - 2016년 분리되어 실시되어 오던 R&D 평가와 지역발전사업 평가수행체계를 통합하여 재정사업 통합평가 실시
 - 평가수행체계가 일원화되었으나 R&D 평가와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수행

- 평가대상 확대

- 2017년 평가에서 기존 1/3의 단위사업 평가에서 전체 단위사업 평가로 확대하였으나 성과관리 대상사업 수의 축소로 전체 평가대상 사업 수 축소

3. 재정사업 심층평가

-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매년 성과가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재정사업(군)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 기획재정부, 부처 관련 재정사업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 심층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안과 지출효율화 방안 도출
 -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기초로 사업 폐지, 변경, 예산삭감,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짐
- 현재까지 74개 사업 및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하여 1.3조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329개 제도개선안이 제시되어 166개 제안이 정책에 반영(박노욱 외, 2015, p.61)

〈표 3〉 재정사업 심층평가 분야 및 연도별 시행횟수 변화추이

(단위: 회)

연도	고용·노동	보건·복지	교육	농림·수산	SOC	산업·경제	기타	합계
2005	1					2		3
2006	1	1		3	2	2	1	10
2007	1		1	3		2	2	9
2008	1	2	2	2	1	2	1	12
2009	1	2	1	1	-	3	2	10
2010	5	-	-	-	-	2	-	7
2011	-	1	1	1	1	1	-	5
2012	2	1	-	1	1	3	2	10
2013	1	1	1	1	1	1	2	8
2014	-	2	-	-	-	2	3	7
소계	9	10	5	10	7	11	22	74

자료: 박노욱 외(2015), p. 59

● ●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개선

-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범부처 사업과 재정제도에 대한 평가 필요성, 평가 선정의 임의성 및 일정 지연으로 인한 품질 저하, 평가수행 지침 및 기존의 재정비에 대응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대상을 확대
 - 개별 사업 평가에서 2010년 범부처에 사업군에 대한 평가와 2017년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범위를 확대
- 평가 선정과정의 체계화
 - 2015년 임의로 선정되어 왔던 평가대상 사업 선정과정을 체계화하여 평가대상 선정 전 예비과제의 평가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심층평가 예비평가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평가대상 선정과정의 합리성을 제고
- 평가수행체계 정비
 - 평가단의 보안, 연구윤리, 일정준수 의무 지침명시
 - 이론 위주의 평가수행지침에서 사례 및 매뉴얼 중심의 실무형 평가지침으로 개정
- 평가기준 개정
 - 사업의 성과와 적절성으로 평가기준 이원화
 - 사업성과: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 사업 적절성: 사업설계의 적절성, 사업운영방식의 적절성

Ⅲ 재정사업평가제도 진단과 문제점

-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문제점이 일선 정부부처와 학계로부터 꾸준히 제기
- 본고에서는 정부 중앙부처 재정사업평가제도 담당자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현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설문조사는 (주) 리서치앤 리서치에 의해 7~8월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약 50개 중앙부처 190명의 재정사업평가 담당자들이 설문에 응답
- 설문조사 결과, 현 재정사업평가제도는 (1) 평가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2) 포괄적 평가로 인한 평가부담의 심화 (3) 평가 형식화에 따른 낮은 평가 수용성 (3) 낮은 평가 역량과 전문성 부족 (5) 성과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부족 등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
- 평가중복으로 인한 평가 효율성 저하
 - 현재 재정사업평가를 포함한 전체 정부 성과평가제도에 대해 중복이 발생하여 평가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행정자치부의 행정역량평가 등 평가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일정 부분 비효율 발생
 - 재정사업평가제도 내에서도 재정사업통합평가, 보조사업평가, 복권기금사업 평가, 기금 존치평가 등 평가중복 발생
 - 재정사업평가제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평가지표와 평가목적이 유사한 평가가 중복적으로 실시된다고 응답
 - 평가지표 중복에는 긍정이 32.1%, 부정이 22.1%로 응답하여 지표가 중복적인 것으로 인식
 - 평가목적 중복에는 동일한 긍정이 36.3%, 부정이 17.9%로 응답하여 평가목적이 유사한 평가들이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

〈표 4〉 중앙부처 재정사업담당자 평가중복에 대한 인식

(단위: %)

질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평가항목이나 지표에 중복이 존재한다.	4.2	17.9	45.8	26.8	5.3	22.1	45.8	32.1
평가목적이 동일한 평가가 중복적으로 실시된다.	3.2	14.7	45.8	28.4	7.9	17.9	45.8	36.3

주: 190명 설문 응답

● ● 포괄적 평가로 인한 평가부담의 심화

-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제도 및 재정사업 통합평가의 경우 전체사업에 대하여 성과지표 및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부처의 평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부처 전체 재정사업에 대한 포괄적 평가로 평가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 평가대상 사업에 포함되고 평가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부처의 평가부담 가중
 - 평가부담의 가중으로 부처의 현업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그 결과 실제사업의 성과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모순 발생
- 부처 재정사업평가 담당자의 경우도 평가준비, 평가 필요성, 평가에 대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평가부담을 인식
 - 평가준비로 현업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1%로 매우 높음
 - 평가 필요성이 높지 않는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불만도 66.3%에 이름
 - 약 71.1%의 응답자가 평가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에 발생한다고 응답하여 평가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표 5〉 중앙부처 재정사업 평가담당자들의 평가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질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평가준비로 현업 수행에 방해가 된다	2.1	10.5	24.2	44.2	18.9	12.6	24.2	63.2
평가 필요성이 높지 않은 사업이 평가되고 있다	2.1	6.8	24.7	49.5	16.8	8.9	24.7	66.3
평가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1.1	6.3	21.6	45.8	25.3	7.4	21.6	71.1

●● 평가 형식화에 따른 낮은 평가 수용성

- 재정사업 통합평가의 경우 체크리스트 방식의 평가로 개별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정보 생산이 어려움
 - 부처 자체평가위원의 경우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태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평가 타당성이 높지 않음
 - 부처 및 사업부서가 제출하는 평가보고서에 의한 형식적 평가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관리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 발생
- 설문조사의 경우에서도 재정사업평가 담당자들은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보다 높게 나타남
 - 약 47.9%의 평가담당자들은 평가결과가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
 - 평가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44.7%에 이룸
 - 평가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43.2%에 달함

〈표 6〉 중앙부처 재정사업 평가담당자들의 평가 타당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질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평가결과가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7.9	40.0	35.8	14.2	2.1	47.9	38	16.3
평가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7.9	36.8	40.5	13.2	1.6	44.7	40.5	14.7
평가방법은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7.9	35.3	43.2	11.6	2.1	43.2	43.2	13.7

● ● 낮은 평가역량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 우리나라의 경우 계급제 원칙에 기반한 공무원의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평가담당자가 1~2년 마다 보직이 변경되어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 관련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상태임
 - 성과관리 및 평가기법에 대한 교육훈련 과목이 적고 사례 중심의 실습교육이 아닌 강의 중심의 직무교육이 이루어짐
- 재정사업 담당자들의 관련 교육훈련 참가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0회에서 1회의 교육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응답하여 전문성 축적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남

〈표 7〉 중앙부처 재정사업평가 담당자 교육훈련 참가횟수

(단위: %)

교육참가횟수 및 교육내용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방법 교육훈련	56.6	29.3	10.2	3.4	0.5	0.0
사업평가 기법 및 활용 교육훈련	72.6	21.6	5.3	0.5	0.0	0.0
전략목표, 프로그램, 단위사업 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훈련	61.6	30.5	6.8	0.5	0.5	0.0
사업 및 과제 성과 관리 교육훈련 (위험관리, 수요조사, 모니터링 등)	74.2	17.9	6.3	1.1	0.0	0.5

●● 평가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부족

-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있으나 사업 위주의 원본보고서 형태로 공개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상위단계의 재정성과정보 제공에 한계
 - 주요 재정통계는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미국은 ‘Performance Dashboard’에 주요 성과정보 분기별 공개
- 재정사업평가 진행과정에 국민 참여의 기회의 제한
 - 재정사업통합평가의 자체평가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주요 성과지표로 정책수혜자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참여의 범위와 강도가 체계적이지 않고 부처마다 상이
 - 공공기관의 평가에는 기관에 대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해 측정된 정책수혜자 만족도가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IV 재정사업평가제도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 현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진단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재정사업평가제도의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통합평가제도 구축: 통합형 재정사업평가

- 단기적으로 재정사업평가 간 중복을 줄이기 위하여 현 재정사업통합평가, 기금평가, 보조금평가, 부담금평가 재정사업 내 평가들을 통합·운영하여 평가 효율성 제고
 - 기금 및 부담금 평가의 통합, 보조금 사전적격심사와 예산편성심사 통합
 - 물리적으로 통합이 어려운 경우 통합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절차를 일원화하고 평가결과 간 비교를 통해 평가결과의 정합성 제고
- 장기적으로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사업평가의 자체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효율성 제고
 - 성과계획서와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보고서와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합하여 단일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계획서와 보고서에는 재정사업과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목표체계와 성과지표를 수록
 - 자체평가의 확인 및 관리는 재정과 제도에 대한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기획재정부나 국무조정실에서 전담

2. 전략적 평가제도 도입: 전략형 재정사업평가

- 일선부처와 담당자의 평가부담을 고려하여 평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평가제도 도입
 -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포괄적 평가에서 부처의 핵심사업 및 장기 문제사업에 대한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평가실시

- 재정사업평가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관 대표성과 평가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질문: 기관 대표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 10.1%, 보통 39.0%, 긍정 50.9%)

●● 자체평가 대상사업 수를 축소하여 부처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책임성 제고

■ 평가의 실익이 작은 소규모사업, 건설사업, 지원사업, 의무지출사업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성과관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개선이 가능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

■ 단위사업 수준의 자체평가단위를 프로그램 수준으로 상향하여 미시적 사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은 부처에 위임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평가당국은 상위단계의 성과관리와 평가에 집중

■ 재정사업평가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상위단계의 평가에 찬성

※ 질문: 전략목표 또는 프로그램목표를 중심으로 자체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 12.7%, 보통 38.0%, 긍정 49.3%)

3. 문제해결 지향적 평가 추진: 문제해결형 재정사업평가

●● 연 단위의 체크리스트 방식의 획일적 평가에서 중장기 시계에서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컨설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지향적 평가(Problem-Solving Oriented Evaluation)로 전환

■ 부처 핵심사업에 대한 심층적 현장조사, 미시적 자료 분석,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부처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출조정방안 및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제시

■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심층적인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정보 활용성 및 부처의 수용도 제고

- 단선적 일회성 평가를 지양하고 사업집행과정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과 미시적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개선안 제시

■ 미시적이고 심층적인 평가정보를 기초로 최종평가를 진행하고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부처의 성과개선에 대한 환류 지속적 지원

- 문제 해결형 평가제도에 대한 재정사업평가 담당자 인식도 긍정적임
 - ※ 질문: 자체평가는 일상적인 점검 위주로 수행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부정 7.6%, 보통 36.7%, 긍정 55.7%)

4. 전문 평가인프라 기반 조성: 전문형 재정사업평가

- ● 성과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금보다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담당자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교육훈련 참가 의무화
 - 실질적 교육을 위해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실습 중심의 ‘Action Learning’ 방식의 교육훈련 커리큘럼 개발 및 보급
 - 성과관리와 평가에 대한 지식교류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일선부처, 해외정부 및 기관, 국책연구기관, 국내외 학계와 성과관리 및 평가네트워크 제도화
- ● 장기적으로 부처 성과관리 및 평가담당업무를 전문직제화
 - 성과관리 및 평가담당업무를 전문직제화하여 순환보직을 제한하고 성과평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설문조사에서도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의 전문직제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 ※ 질문: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장기근무를 위한 전문직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 27.4%, 보통 36.7%, 긍정 35.9%)

5. 국민소통 평가시스템 구축: 소통형 재정사업평가

- ● 국민이 체감하는 개방형 성과포털을 구축하여 재정성과정보를 공개하여 대국민 책임 제고

- 주요 사회적 성과지표에 대한 분기별 성과현황 포털에 제시
 - 주요 사회적 성과지표 달성에 기여하는 재정사업 성과지표와 지표 연관 관계망을 제시하여 정부성과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및 신뢰 제고
 - ※ Performance Indicator Chain
 - 출산율 - 보건복지부 기저귀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여성취업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주택지원사업, 교육부 방과후 학교 사업 등

- 주요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 만족도의 측정 표준 모델 개발
 - 공인된 기관에 의한 주요 재정사업 표준 국민 만족도 측정
 - 주요 재정사업성과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채널을 구축하여 국민과의 소통 확대

| 참고문헌 |

- 기획재정부, 「2017 재정사업통합평가지침」.
- 박노옥·오영민·원종학,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오영민,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재정포럼』 5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오영민,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의 운영성과와 제도적 개선방안」, 『재정포럼』 12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BRIEF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17. 10. 16(통권 제58호)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 044-414-2123
 - 팩 스 : 044-414-2129
 - 인쇄처 : 아미고디자인
-

